

# 靑 ‘경찰대 편입학 검토’에 대학들 “학생 빼가나?” 반발

경찰 순혈주의 배제 필요하지만  
각 대학 편입 준비 위한 수단될수도  
수요 많은 만큼 중장기적 검토 필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의 경찰대 편입학 검토를 시사한데 대해 각 대학들은 경찰대 편입학 준비를 위한 ‘피더 스쿨(feeder school)’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경찰 순혈주의를 막는 길은 경찰대 폐지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는 지난해 대선 기간 중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대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4일 권력 기관 개혁안 발표 후 사건을 전제로 “경찰대가 만들어지던 때의 경찰행정학과는 동국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국 수십개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다”며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경찰대 순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광대경 교수(홍보처장)는 15일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경찰대 편입학이 허용되면 대학 입장에서 학생들을 경찰대에 빼

앗길 수 밖에 없다”면서 “순혈주의 배제는 필요하지만, 현 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경찰대 폐지를 얘기했던 것과 비교하면 미봉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경찰대 편입학이 허용될 경우 일반대 2년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뒤 3학년으로 입학하는 유형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일반대학의 경우 경찰대 편입학 준비를 위한 피더 스쿨로 내몰리게 된다.

광 교수는 이어 “경찰 간부가 되고 싶어하는 지원자들은 충분히 많다. 더군다

나 사법시험이 없어지면서 경찰 간부 쪽으로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경찰대를 폐지하고 전국 경찰행정학과 졸업자를 비롯한 많은 지원자들을 시험을 통해 경찰 간부로 등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다수 대학들은 경찰 조직의 순혈주의 혁파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경찰대를 그대로 둔 채 편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미봉책이고 현실성도 없다는 의견이 많다.

경찰대 출신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이성용 교수는 일반 대학의 경찰대 편입

학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순혈주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청와대가 내놓은) 해결방법이 약하다고 본다. 경찰행정학과 등 사립대에서 공부하고 경찰 간부후보생시험을 봐서 경위로 입직하는 제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경찰대에 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모든 경찰이 순경에서 시작하는 영국과 미국 경찰과 비교하면서 “민주화된 사회구조시스템에 맞게 경찰 간부 양성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황의갑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찰대가 치안대학원 형태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 교수는 “하나의 대학에서 기수에 따라 연결되는 지금의 체제는 민주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루트와 출신을 허용하는 개혁방안은 올바르다”고 했다. 황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찰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면서 “현직 경찰을 재교육시켜 간부로 육성하는 치안대학원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은 경찰대 폐지가 되더라도 경찰연수원의 1년 과

정의 경찰 간부교육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광대경 교수는 “80년대처럼 (경찰대에)예산을 서서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면서 “경찰 간부가 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만큼 우리나라 인적자원 효율화 측면에서도 (경찰대 폐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대도 자체 TF를 만들어 경찰대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대는 지난해 12월 송원영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경찰대 개혁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경정이 4명으로 구성되는 팀은 오는 24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송원영 경찰대 개혁TF 팀장은 “TF의 제는 경찰대 순혈주의만 한정하지 않는다”면서 “경찰대가 설립 40년 가까이 됐고, 시대도 많이 바뀌었지만 경찰대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안을 마련해 개선토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경찰행정학과는 동국대를 비롯해 용인대, 경기대, 순천향대, 조선대, 우석대, 계명대, 대구대, 동서대 등 전국 약 28개 대학이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 지원자들이 많아 대다수 대학내 상위권 입학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구세윤 인턴기자

## 교육부, 4차산업 선도대학 10곳 100억 지원

‘거꾸로 학습’ 등 혁신 수업방식 도입  
미래 융합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 10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 대학들은 ‘거꾸로 학습’, ‘프로젝트 기반 수업’ 등 혁신 수업 방식을 도입해 미래 융합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100억 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하 혁신선도대학)’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기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을 추진하는 55개교가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16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2월 중 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3월 중 평가를 거쳐 4월 10개 대학을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 학교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100억 원을 지원받고, 이후 내년 단계평가를 거쳐 2021년까지 총 4년 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 ‘혁신선도대학’ 평가 영역별 배점〉

평가역역	주요 평가 내용	배점
Vision	혁신선도대학의 추진 배경 및 추진 목표	10
교육과정 혁신	교육과정 혁신 계획의 적절성, 타당성	25
교육방법 혁신	교육방법 혁신 계획의 적절성, 타당성	20
교육환경 혁신	교육환경 혁신 계획의 적절성, 타당성	15
사립관리 및 성과관리	사업 및 성과관리의 세계성, 사업성과의 지속가능성	30

/교육부

선정 평가는 1차 서면평가로 1.5배수를 선정한 뒤 2차 심층 대면평가로 진행된다. 평가 영역별 배점은 비전(10점), 교육과정 혁신(25점), 교육방법 혁신(20점), 교육환경 혁신(15점), 사립관리 및 성과관리(30점) 등이다.

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비판적 사고력, 소통능력, 창의력, 협업능력 등의 능력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정규 교육과정을 기초교과와 전문교과, 어드벤처 디자인 등 4차 산업혁명 친화적 커리큘럼으로 개편하고, 학과 간 교육과정 개방, 온

라인 공개강좌를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수업(PBL) 등 혁신적인 수업 방법도 도입된다.

아울러 혁신 교육을 위한 시설과 기자재 선진화와 실험실과 강의실 환경 개선 등 물리적 교육환경 개선과 교수법 혁신 활동 실적을 교원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학사제도도 유연화하는 제도적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혁신선도대학을 우선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지속가능한 대학교육 혁신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타 대학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 수능없이 재직자 선발, 대학 평생교육 강화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전형 개발 등  
대학 진학 기회 확대되도록 유도할 것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없이 기업 재직자를 선발하는 대학 12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대학들이 직업교육을 받은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개발하는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권역에서 총 12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총 10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인학습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4개교 내외를, 나머지 지역 4개 권역에서는 권역별 2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 평가에서는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실적과 계획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성인 학습자의 실질적인 대학 진학 기회가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5월 융합전공제 도입, 11월 4년제 대학으로 학습경험 인정제 확대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사업 신청 대학은 운영모델과 운영규

모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정원내 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학위과정 성인학습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교육과정(1년) 이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학생 선발은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대학이나 학과 특성에 따라 서류·면접으로 선발하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특히 입학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위법이나 편법이 적발 시 성인학습자 정원 또는 사업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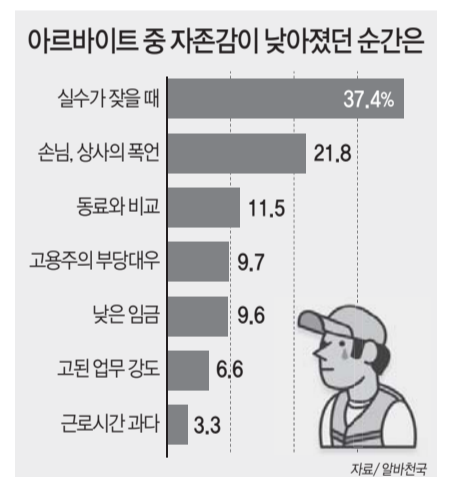
## 10·20대 절반 “현재 자존감 낮다”

행복한 지인 볼때 자존감 낮아져

10대와 20대의 10명 중 5명은 자신의 자존감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월 9일까지 전국의 10~20대 회원 1648명을 대상으로 ‘2018 자존감을 말하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7.9%가 현재 자신의 자존감 상태를 묻는 질문에 ‘낮다’고 평가했다. ‘높다(12.6%)’ 혹은 ‘매우 높다(4.8%)’고 평가한 응답자는 17.4%에 불과했다.

현재 자신의 자존감 상태를 ‘낮다’, 또는 ‘매우 낮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10대(41.2%)보다 20대(49%)가 더 높았다.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상황은 ‘행복해 보이는 지인들의 SNS를 볼 때’가 26.8%로 가장 높았다.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22.6%)’, ‘취업이 안될 때(20%)’, ‘외모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13.6%)’, ‘친구나 상사와 갈등이 생길 때(9.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 중 가장 자존감이 낮아졌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37.4%가 ‘실수가 잦을 때’라고 답했다. 이어 ‘손님 및 상사의 폭언에 시달릴 때(21.8%)’, ‘동료와 비교 당할 때(11.5%)’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2%가 ‘친구·동료(37.5%)’와 ‘부모님(25.7%)’을 꼽았다.

/구세윤 인턴기자 yuni2514@

## 서울시민 재난 걱정 ‘뚝’ 서울안전앱 공개

편리성·접근성 등 개선

서울시가 재난 안전 포털 ‘서울안전누리’와 재난 발생 알람 서비스 ‘서울안전앱’을 각각 개편·공개했다.

시는 서울안전누리 포털의 이용 편리성과 접근성 등을 개선해 재난 속보와 사고 속보를 메인 화면에 추가 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누리집 주요메뉴는 재난 속보와 사고 속보, 행동요령, 재난 대비 시설, 주요 안전 정책, 생활 날씨, 열린 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메인 화면에서 서울 지역 내 실시간 재난과 사고 속보 정보, 재난 유형에 따른 상황별 행동요령, 주요 재난 도시 안전 정책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포털은 재난 유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단계별 카드 형태로 행동요령을 제공한다. 서울안전누리는 반응형 웹으로 개편돼 데스크톱과 아이패드,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서울안전 앱은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정보의 실시간 푸시알림을 보낸다. 재난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단계의 상황별 행동요령, 위치기반 맞춤형 관련 정보(지진옥외대피소 등 재난대비시설, 쉼터, 주변 병·의원, 심장자동충격기 등)도 제공한다.

맞춤설정을 통해 관심 있는 재난과 사고 속보, 날씨정보 등 선별해 알림을 받을 수도 있다. 가족과 친구에게 문자와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로 공유할 수도 있다.

/이범종 기자 joker@